

【 문제-1 】 (30점)

甲은 A로부터 X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乙이 위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이 사건 대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乙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이 사건 변론에서 甲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2)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을 인수승계 신청하면서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과 A는 X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공동으로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乙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2023. 10. 23. A가 사망하였다. A의 상속인으로는 甲과 丙, 丁이 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A에게는 소송대리인은 없으며, 2024. 1. 30. 甲만 수계신청하여 본안에 관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항소심법원은 甲만을 A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적법한지와 丙과 丁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2) 甲과 丙, 丁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甲은 2024. 3. 30.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공유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2. 丁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25. 1. 25. 소를 취하하였다. 丁은 이 사건 2025. 4. 20.자 소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1/2공유지분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항소심법원은 공유지분의 양도인 甲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재소금지의 효과가 공유지분 양수인 丁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이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1. 11. 동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4. 18. 丙과 대물반환예약(이하, '제1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乙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乙이 2012. 9. 16.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는 후 2013. 4. 1.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제2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3. 4. 3. 제1 담보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乙은 같은 날 乙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제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운 담보가등기(이하, '제2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甲이 2014. 10. 9.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제2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이후 甲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최초의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甲으로서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그리고 甲은 2016. 11. 5. 환송 후 원심에서 제1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제2 대물반환예약 자체로 인하여 소외인 乙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甲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이 2014. 10. 9.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제1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10. 20. 丙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甲은 2014. 11. 10. 다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제2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丙은 2015. 1. 20. 제1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제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각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그리고 甲은 2015. 2. 15. 제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제출한 소취하서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은 소송대리인 A를 선임하여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9. 패소하였고, 甲은 이 판결에 대하여 2015. 10. 23.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재판장은 2015. 10. 30.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이를 甲의 원심 소송대리인 A에게 송달하였을 뿐 甲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甲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통해 원심 소송대리인 A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원심재판장은 2015. 12. 10. 甲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재판장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甲은 2024. 2. 5. 乙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2024. 5. 4.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A는 소송계속 중 甲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참가 신청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甲의 乙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4. 12. 20. 변론종결되었으며, 乙은 2025. 1. 15.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5. 2. 20. 甲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A는 2025. 3. 10. 乙을 상대로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2) 甲은 주채무자 B에게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반환을 거부하자 보증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B는 丙을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丙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정본은 2025. 5. 27. 丙에게, 2025. 6. 4. B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그리고 丙과 B는 2025. 6. 14. 공동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